

민주노총 7.22동맹파업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

✎ 홍미리 기자 | ⓒ 승인 2014.07.22 23:00

박근혜정권 퇴진!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주노총 동맹파업...“민주노총 총단결로 세상을 바꾸자!”



▲ 민주노총이 22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주노총 동맹파업 집회'를 열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7월 22일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동맹파업에 돌입했다.

'박근혜정권 퇴진!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주노총 동맹파업 집회'가 7월 22일 오후 5시 경 서울 시청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건설현장 법제도 개선 △의료 민영화 저지·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분쇄 △민주노조 사수·간접고용 철폐 등을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후 민주노총 가맹산하 조합원들은 광화문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서명 운동에 합동으로 참가했다.

김병권 세월호참사유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딸을 잃고 그 죄를 조금이나마 속죄코자,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사회 근본적 개혁과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9일째 단식 중”이라고 전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 때까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722동맹파업에 보건의료노조 140개 4만5000조합원이 함께 하고 있다”고 전하고 “세월호 참사와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로 사망한 이들이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민영화를 중단하고 보건의료인력을 2배로 확충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비롯한 공공병원 확충에 나서는 것이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 세월호참사유가족대책위원회 김병권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제대로된 특별법을 만들때 까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 변백선 기자



▲ 민주노총이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동맹파업에 돌입했다. © 변백선 기자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영혼만은 팔 수 없었던 진기승 열사가 돌아가신 지 52일 만에, 열사가 목을 맨지 84일 만에 오늘 장례를 치렀다"고 말하고 "그동안 함께 연대하고 지지해준 분들께 늦게나마 장례를 보고드리고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인사했다.

이 위원장은 "자본의 배를 불리려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화를 강행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공공운수노동자들은 오는 8월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법을 제정하라!"

"자본의 탐욕을 저지하자!"

"정규직화 실시하자!"

"민주노총 총단결로 특별법을 제정하자!"

"민주노총 총단결로 세상을 바꾸자!"

"박근혜는 퇴진하라!"

"민영화를 중단하라!"

“잊지 말고 행동하자!”



▲ '박근혜 퇴진!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주노총 동맹파업 집회'에 참석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가짜 정상화 반대' '의료민영화 반대'라고 적힌 수건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80만 전 조직이 더 큰 투쟁을 조직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신 위원장은 “의료민영화를 보건의료노조에게만 맡기고, 철도민영화는 철도동지들만 싸우게 하고, 통상임금은 현대기아차만 투쟁하고, 노조인데 노조로 인정 못받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도 그냥 두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그런 16개 산별연맹이 모여야 비로소 되는 민주노총이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이라는 집단적 가치를 소중히 하며 실현하려면 80만이 함께 해야 한다”면서 “이대로는 박근혜 정권을 주저앉힐 수 없고 내 자식이 죽어 울부짖는데 그 위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여의도 국회를 뒤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승철 위원장은 “임금은 각 사업장 투쟁으로 채울 수 있지만 1%도 안 되는 자본과 정권의 탐욕을 멈추고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80만이 더 큰 투쟁을 만들어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722동맹파업에 나선 투쟁사업장들이 무대에 올랐다. 박성남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레이테크코리아 조합원, 박재범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씨앤엠지부장, 김정현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경기타워크레인지부장, 이향춘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 김기완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위원장,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여의도성모병원지부장이 투쟁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국민살인 정권·무책임·무능 정권 박근혜 퇴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철도·의료 민영화 중단·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즉각 폐기, 건설현장과 모든 노동현장의 잘못된 법제도 개선·반노동정책 폐기, 간접고용·특수고용 등 모든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노조탄압 중단, 살인적 세계 최장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통상임금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대회 이후 민주노총 각급 조직의 조합원들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단식농성을 잇고 있는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해 단식자들을 응원하고 416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서명 운동에 참가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파업집회 본대회에 앞서 가맹산별연맹들이 서울 도심에서 사전대회를 열어 단위조직별 결의를 다졌다. 건설산업연맹 산하 건설노조는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플랜트노조는 서울역에서 대정부투쟁 결의대회를 각각 연 후 서울광장에 집결해 '건설노동자 총파업대회'로 모아냈다.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이날 2차 파업에 나선 보건의료노조는 13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의료민영화저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졌고, 오후 7시30분 여의도 한강둔치 물빛무대에서 파업문화제를 펼쳤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는 오후 2시30분 서울대병원 앞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분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는 오후 2시 홈플러스 영등포점 앞에서 파업집회를 열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가족 단식에 연대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지난 7월 18일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 대회 이후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단식농성을 잇고 있는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해 단식자들을 응원하고 416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서명 운동에 참가했다. © 변백선 기자



▲ 사전대회 '건설노동자 총파업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건설노동자. © 변백선 기자

■ 민주노총 722동맹파업 투쟁결의문

세월호 참사 백일이 다가오고 있다. 참사가 불러온 애도와 분노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지도 백일이다. 정부의 무능과 자본의 탐욕이 참사의 본질을 외면한 채 단 한 명의 생존자도 구출하지 못하고 흘러보낸 시간도 꼬박 백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희생자 가족대책위의 처절한 특별법 제정 요구를 외면한 시간도 백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폭정과 실정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로 민주노조를 다 죽이겠다는 뜻을 보다 분명히 했다. 의료민영화 시행령 입법예고, 인천 공항철도 매각 추진 등 민영화 정책도 지속되고 있다. 새로운 장관들은 하나같이 떳떳하지 못한 이들이며, 그 속에서 국정쇄신을 위한 노력은 일체 찾아볼 수가 없다. 박근혜의 정치는 아집과 불통이며, 노동자 말살이며, 국민 기만이다.

이에 우리 노동자는 투쟁으로 답한다.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규제완화와 민영화, 비정규직 확산 등 자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국민과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부당함에 투쟁으로 맞선다. 한 해에 2천4백명의 노동자가 건설현장과 사업장 곳곳에서 산업재해로 죽어나가도, 민주노조를 인정하라며 수많은 노동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이윤을 위해서는 노동자 목숨따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본의 비정한 논리를 동맹파업 투쟁을 시작으로 끊어낼 것이다.

민주노총 동맹파업은 모든 이의 생명과 안전,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비롯한 산업재해, 정리해고, 비정규직, 장애, 빈곤 등 모든 죽음을 애도하며, 권력과 자본의 탐욕과 횡포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민주노총의 동맹파업은 또 다른 참사를 불러올 잘못된 규제완화와 민영화, 비정규직 확산 정책을 막기 위한 투쟁이다. 시민 안전을 내팽개친 채, 가진 자의 배를 더욱 불리기 위한 민영화가 강행되는 한 우리 안전은 요원하다. 철도와 의료, 가스, 발전 등 넘쳐나는 민영화를 막지 못한다면, 바다에서 벌어진 참사가 철로 위에서, 병원에서, 학교에서 재현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민주노총의 동맹파업은 무능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퇴진을 요구하기 위한 투쟁이다. 국민의 목숨보다 자신의 권력을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이 있는 한 참사는 반복된다. 반성과 성찰 대신 회피와 외면을 선택하는 대통령이 있는 한 참사는 막을 수 없다.

민주노총의 동맹파업은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고, 잘못된 노동현장의 법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다. '민주노조를 인정하라'는 수많은 노동열사의 염원을 풀기 위한 투쟁이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잘못된 통상임금을 바로잡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주어지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다.

동맹파업은 당연히 해야 할 싸움의 시작일 뿐, 그 끝도 아니며 정점도 아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모든 국민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의하고 요구한다.

하나. 국민살인 정권, 무책임-무능 정권 박근혜는 퇴진하라!

하나.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하나. 철도-의료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를 즉각 폐기하라

하나. 건설현장과 모든 노동현장의 잘못된 법제도를 개선하고,

반노동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간접고용-특수고용 등 모든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노조탄압 중단하라

하나. 살인적인 세계 최장노동시간 단축하고, 최저임금-통상임금 정상화하라

2014년 7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7.22. 동맹파업대회 참가자 일동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